



# 「2022년 경찰공무원 시험대비」 헌법 모의고사 및 해설(1)

| **고영동** 교수 | 박문각 경찰학원



### 01.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 헌법사항에 대한 관행의 존재,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의 다섯 가지를 들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관습헌법은 헌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사항에 관하여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 그 관행이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하게 되면 관행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므로, 관습헌법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이 상실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정답] ③

【해설】 헌법총론 - 관습헌법

■ 난이도 중

① (O), ② (O), ③ (X), ④ (O)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우선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반복·계속성),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되고(항상성), 넷째,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명료성). 또한 다섯째,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산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민적 합의)(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 02.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 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 ②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
- ③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 ④ 세계평화주의

[정답] ②

【해설】 헌법총론 - 헌법 전문

■ 난이도 하

- ② (X)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수록된 내용이다.

\*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03. 국적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선천적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다.
- ②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일반귀화를 할 수 있다.
- ③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④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정답] ①

【해설】 헌법총론 - 국적

■ 난이도 하

- ① (X) 구 국적법상의 부계혈통주의를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00.8.31. 97헌가12).
- ② (O) 국적법 제4조 제1항
- ③ (O) 국적법 제9조 제1항
- ④ (O) 국적법 제15조 제1항

### 04. 헌법재판소가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판시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 ②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 ③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 ④ 종전의 규정이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으로 대체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헌법총론 - 헌법의 기본원리

■ 난이도 하

- ④ (X) 헌법재판소는 1998.9.30. 97헌바38 결정에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①, ②, ③ 이외에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위의 네 가지 이외에도 ④를 추가하고 있다.

### 05.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열선거운동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 ② 선거 관련 법률에서 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만 얻으면 당선인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은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 ④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1인 1표와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고려한 선거구 간의 인구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행정구역,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전통적 일체감과 같은 정책적·기술적 요소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해설】 헌법총론 - 선거제도

■ 난이도 하

- ① (O) 헌재 2005.9.29. 2004헌바52
- ② (O) 헌재 2003.11.27. 2003헌마259·250 병합
- ③ (O) 헌재 1999.9.16. 99헌바5
- ④ (X) 우리 헌법은 제41조 제3항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제도와 선거구의 획정에 관한 구체적 결정을 국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고려한 선거구 간의 인구의 균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10.25. 2000헌마92 등).

< 다음호에 계속... >